

오월정신 지속적 계승 힘쓰고 왜곡 강력 대응해야



5·18
자랑스런 한국의 역사

3부-5·18기념재단 30주년

〈하〉 남겨진 과제

50주년을 바라보는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역사에 아로새겨지려면 '5·18기념재단' (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30주년을 맞는 재단에 대한 점검과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과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재단이 지속적인 오월정신 계승작업의 주축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재단에 따르면 올해 재단의 운영 예산은 34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31억 8200만원을, 광주시에서 2억 2150만원을, 전남도에서 1000만원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받고 있다.

법령에 따른 예산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제에 상황이 따라 변동이 가능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걸림돌이다.

올해 광주시가 왜곡대응예산 2억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비판이 일자 부랴부랴 삭감된 금액의 일부인 4000만원을 부활시켰다.

반면 '제주4·3평화재단' (4·3재단)의 올해 예산은 총 113억원으로, 사업비는 재단 설립 당시 특별법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다.

행안부로부터 사업비 명목의 42억원을, 제주도로부터 운영비 명목의 66억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4·3기념공원 위탁 운영비(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은 지자체인 제주도에서 지원한다.

재단의 성격으로 보면 4·3재단은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이고 5·18 기념재단은 공공기관의 성격

보조금 형식 운영에 예산 불안정 새로운 사업 모색·인력 확보 난망 끊이지 않는 왜곡 대응 한계 노출 매너리즘 견제할 시스템 마련 재원 안정 확보·방향성 설정 필요

을 띠는 공직유관단체라는 점에서 예산의 근거가 달라지는 것이다.

5·18 기념재단은 보조금 형식의 사업비로만 운영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인력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끊이지 않는 5·18의 왜곡과 폄훼 대응에서 이같은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5·18 왜곡은 보수언론, 온라인, 서적,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파되고 있지만, 재단의 대응인력은 2명 뿐이다.

매년 왜곡 모니터링 등을 통해 왜곡의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하면서 다시는 왜곡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인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5·18 후속세대에 오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승 기념사업에서도 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년 단위로 행사위원회 집행부가 꾸려질 때마다 오월 기념행사의 틀이 변화되고 있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재단이 기념행사의 주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5·18기념행사는 시민사회, 재단, 오월 단체 등이 5·18행사를 꾸려 매년 준비하고 있다.

재단은 "5·18이 '재야'에서 주도하던 시기부터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축제 운영 방식이 5·18의 역사성에 맞다"는 입장이지만 4·3재단의 경우 전야제, 공연 등의 모든 행사는 재단이 주관하고 있다. 4·3과 관련된 행사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 등을 꾸려 운영하는 방식이



20일 오후 44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민주기사의 날' 행사에 참여한 택시기사들이 광주시 북구 무등경기장에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까지 1980년 5월 차량 시위를 재현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다. 재단은 이어 "매년 기념행사가 변화없이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알고 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재단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이끌어갈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 재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재단이 매너리즘과 당사자 주위에 빠지는 것을 견제하는 내부 시스템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안팎의 목소리도 있다.

이와 함께 재단 단독 건물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재단은 5·18기념문화센터의 일부공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연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류봉식 광주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공법단체의 용서와 화해 선언 당시 재단의 제재가 없어 컨트롤 타워 부재 현상이 발생했다"며 "재단이 관련 단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오월정신지킴이 시도민대책위원회 대변인은 "5·18 재단 창립 선언문에는 '5·18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5·18은 재단도, 공법단체의 것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긴밀한 소통, 정책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민주기사의 날' 행사 시민사회 첫 주최 진행

1980년 5월 20일, 계엄군의 폭압적인 진압에 맞서 금남로를 가득 메웠던 택시의 행렬을 재현하는 '민주기사의 날' 행사를 처음으로 시민사회가 주최했다.

5·18행사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민주기사동지위원회와 논의한 끝에 올해 민주기사의 날 행사를 5·18행사로 주최로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행사는 당초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주최하는 행사지만, 국가보훈부가 최근 감사를 거쳐 수사의뢰 절차를 밟고 있는 두 공법단체에 행사 후원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행사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보훈부는 해마다 1150만원 수준의 민주기사의 날 행사 후원금을 지원했다.

이에 행사를 주관하는 광주민주택시노조와 민주기사동지회는 지난 18일 5·18행사로 "어떻게든 행사가 열릴 수 있게 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대안으로 5·18행사가 보훈부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주최자로 이름을 올리고 행사를 치렀다.

김순 5·18행사위 집행위원장은 "보훈부가 두 공법단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부활제마저 좌초되지 않을지 우려가 됐다"며 "단체들 간의 의견을 잘 조율해 차질 없이 5월 행사를 모두 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형평, 후원금 무단 사용, 유령 직원 급여 지급 등의 비리를 적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부실 논란' 5·18조사위 보고서 결국 일부 수정

개별조사 '조사 불능 결정' 반발에 내용 수정해 종합보고서 초안 작성 전원위, 정호용·최세창 등 11명 고발 여부는 다음 회의서 심의키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개별보고서 내용을 일부 수정해 종합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

5·18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3공수여단장 등 총 11명의 계엄군 고발 여부는 다음 회의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 일병 사망사건, 무기고 피습 사건 등 일부 개별 조사 결과가 '조사 불능 결정'됐던 것에 대해 광주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자 일부 내용을 수정했으나 민간인 학살 관련 1980년 당시 최용 11여단장 등 계엄군 9명에 대한 고발건은 혐의입증 서

류 미비로 제동이 걸렸다.

진상조사위는 20일 제123차 전위원회회의를 열고 '종합보고서 상정안', '반인도적 범죄행위 고발안' 등 2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전위원회회의는 처음으로 국민참여 방청으로 진행됐다. '종합보고서 상정안' 회의 내용은 공개됐으나 '반인도적 범죄행위 고발안'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국민의 힘 추천 위원 3명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초안)를 두고 '의결됐던 개별보고서 내용이 수정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권 일병 사망사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등 내용이 당초 의결된 개별 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상이하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은 회의에서 "권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 고등법원 판결 당시에도 발견되지 않았던 '검시 조서'를 발굴하면서 '사인을 모르겠다'는 결론을 냈는데, 종합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무기고 피습 사건에 대해서는 오전 피습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발언했다.

위원들 간 이견이 생기면서 '종합보고서 상정안'은 계류됐으나, '회의에 상정된 종합보고서(안)를 바탕으로 심의를 하되, 추후 수정·보완 여부를 두고 심의를 진행한다'는 안은 통과됐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은 이번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심의에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다. 이날은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 등을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안에 대한 심의도 같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안건에는 오르지 못했다.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송암동, 주남마을, 옛 전남도청 일대 등지에서 학살을 자행한 11공수 계엄군 9명에 대한 고발여부도 심의를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서류 등의 미비로 보류 결정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 혐의가 고발장에 적시가 안 돼 최종 보고서에 확인된 내용으로 고발장을 재작성해 다시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호용씨와 최세창씨 등과 함께 11명에 대한 계엄군 고발건의 심의는 다음 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는 이들이 과거 1997년 대법원 판결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추가 범죄 사실과 연루됐다고 판단,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회의에 상정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창호(샷시)교체